



EU 경제통상 브리핑



주요 내용

□ 포커스

- EU 집행위원회,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발표
- EU 22개국, '28년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 가속화 추진

□ 단신

- [통상] EU, 알루미늄 스크랩 역외 수출에 15% 부과금 도입 검토 중
- [운송] 독일 車업계, 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규모 구조조정 중
- [보건] EU, 임상조사 면제 대상 의료기기 목록 확대 위임규정 관보 게재(6.29)

□ 안내 : 브뤼셀무역관 PPWR 웨비나 영상, KOTRA 유튜브 채널 게재

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일정	내용
7.1(수)	방위 단일시장 통신문 발표,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 발표
7.6(월)~9(목)	유럽의회 본회의 개최(EU-멕시코 협정 논의, SDGs 이행 현황 논의, 제28번째 법체계 논의, 2026년도 수정예산안 표결 등)
7.7(화)	사이버보안·AI 행동계획 발표(잠정)
7.10(금)	EU 경제·재무 이사회 개최
7.13(월)	EU 외교 이사회 개최
7.15(수)	EU-ETS 개정안 발표 및 ETS 검토 보고서 발표
7.22(수)	에너지 패키지 발표(전기화 행동계획)



EU 집행위원회,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발표

- ◎ EU 집행위원회는 7.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가별 철강 무관세 쿼터(TRQ) 배분 시행규정 발표
- ◎ 신규 조치는 FTA 체결 여부와 '22~'24년 품목별 EU 내 평균 수입 점유율에 따라 쿼터를 전용 쿼터와 공용 쿼터로 배분하며, 공용 쿼터는 교역국 간 선착순 경쟁을 통해 접근 가능
- ◎ 동 시행령은 '26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연중 관련 법안을 통해 후속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□ 배경

- EU는 6.30일부 종료되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고,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7.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 시행규정을 발표(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6/1457)
- EU 전체 철강 무관세 할당 물량(TRQ)은 1,834.6만 톤으로 기존 대비 46% 축소되며, 쿼터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는 25%에서 50%로 인상됨
- EU의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대응 조치(Regulation (EU) 2026/1384)는 '25.10.7일 집행위원회 최초 제안 이후 6.24일 관보 게재돼 7.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, 국가별 무관세 세부 쿼터 배분에 대해서는 개별 협상이 진행돼 왔음

□ 주요 내용

- **(배분 구조)** 모든 쿼터는 ①모든 제3국에 개방되는 최혜국(MFN) 물량과 ②EU FTA 체결국 대상 FTA 물량으로 나뉘며, 이는 다시 '22~'24년 기준 30개* 철강 품목별 EU 내 평균 수입 점유율을 고려한 국가별 전용 쿼터(CSQ)와 공용 쿼터(Residual)로 구분
 - * 품목군은 총 26개이나, 이 중 4개 세부 품목이 A/B로 분류돼 총 30개로 산정
- MFN 물량은 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최근 3년('22~'24년) 평균 EU 내 수입 점유율 기준으로 배분되고, FTA 물량*은 △기존체결 예정 FTA 내용, △제3국 조치가 EU 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, △공급선 다변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
- * 집행위원회는 신규 시행규정이 전체 TRQ의 절반을 FTA 체결국에 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, 우크라이나의 경우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우대한다고 밝힘
- 전용 쿼터는 '22~'24년 품목별로 EU 내 평균 수입 점유율이 5%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배정됨. FTA 체결국은 MFN과 FTA 물량을 모두 할당받으며, 전용 쿼터 소진 시 체결국 간 선착순 경쟁으로 확보하는 물량(FTA Quota-CSQ)에 접근 가능
- 공용 쿼터는 해당 품목에 전용 쿼터가 없는 경우 활용하며, FTA 체결국은 FTA 쿼터-기타 국가(FTA Quota-Other countries) 물량과 기타 국가(Other countries) 물량에 접근할 수 있음. 일부 체결국은 FTA Quota-Other countries에 따른 국가별 할당량을 보장받음

구분	EU 품목별 수입 점유율 5% 이상	EU 품목별 수입 점유율 5% 미만
FTA 체결국	전용 쿼터 사용	FTA-Other countries, Other countries 접근 가능
	(전용 쿼터 소진 시) FTA-CSQ 접근 가능	
FTA 미체결국	전용 쿼터 사용	Other countries 접근 가능

* (참고) FTA-CSQ, FTA-Other countries, Other countries 물량의 품목국가별 이용 가능 여부는 시행규정 Annex II 참고

- **(한국 쿼터 배분 결과)** 한국은 전용 쿼터를 총 207.3만 톤*을 배분받았으며, 국가 간 경쟁으로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 별도 존재
 - *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한국 국가 쿼터(258.1만 톤, '25.7~'26.6월 기준) 대비 약 19.7% 감소
- **(시행 세부사항)** 해당 시행규정은 '26.12.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'26년 연말 이전 EU 집행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후속 법안을 제안할 예정
 - * 동 시행규정은 7.1일까지 국가별 TRQ 할당량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EU 내 긴급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
 - 연간 운영 기간(당해연도 7.1일~익년 6.30일) 내 분기별 무관세 쿼터 중 미사용된 잔량은 다음 분기로 이월 가능
 - EU산 제품이 제3국에서 원산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을 거친 경우, EU로 재수입될 때 해당 제3국 쿼터 적용 대상으로 취급됨
 - EEA 국가는 쿼터 부과 대상이 아니나, 제3국 생산자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EEA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용해 및 주조(melt and pour)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□ 주변국·업계 반응

- **(제3국)** 현지 언론 Borderlex에 따르면 일본은 EU 철강 시장 접근이 대폭 축소되는 데 대해 EU-일본 FTA에 근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 중이며, 이 경우 특정국이 FTA 위반을 이유로 EU를 제소하는 최초 사례
 - 익명의 한 아시아 국가 장관 역시 Steel News를 통해 이번 EU의 제도가 FTA를 위반하는 것이며, 대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
 - 한편 영국 정부는 신규 쿼터 제도가 양측 무역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며, 영국 철강산업협회 역시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할당량 확대를 희망
 - 현지 언론 Politico에 따르면 FTA 체결국 중 EU와 협상에 참여한 국가의 TRQ 물량은 1/3 수준으로, 미참여 국가(일본, 베트남 등)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중국 등 비 FTA 국가의 경우 TRQ가 약 2/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**(업계)** 유럽철강협회(Eurofer)의 악셀 에거트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에서 손실된 최대 1,500만 톤의 철강 생산량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

• 자료 : EU 집행위원회(6.30, [FAQ](#), [팩트시트](#), [시행규정](#)) / 작성자 : 브뤼셀무역관 송지현(jhsong_a@kotra.or.kr)

EU 22개국, '28년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 가속화 추진

- ◎ 22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확대를 위한 3자 협약 체결
- ◎ '28년까지 22개 회원국 합산 30~35GW 규모의 신규 에너지 저장 용량 구축 목표

□ 개요

- EU 이사회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로 에너지 저장에 관한 EU 최초의 3자 협약 체결
 - 22개 EU 회원국 장관은 EU 에너지 장관회의(6.22)와 연계해 EU 집행위원회, 회원국, 산업계(관련 개발·제조·수요 기업), 금융기관이 참여한 에너지 저장에 관한 3자 협약 체결
 - EU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은 유럽 전력 시스템의 신속한 탈탄소화 및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며, 향후 2년간 총 30~35GW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

□ 주요 내용

- 에너지 저장*에 관한 3자 협약의 주요 목표
 - * 동 협약상 에너지 저장은 배터리 저장 시스템(BESS)뿐만 아니라 전기차(EV), 양수 발전, 열 저장, 흐름 전지 및 재생 에너지 연계형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저장 방식을 포괄
 - **(저장 용량 목표)** '26년 초 기준 약 55GW 수준인 저장 용량을 '30년 예상 수요치인 200GW까지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, '28년까지 신규 저장 용량 45GW를 확보하고자 함
 - 이를 위해 참여 회원국은 '28년까지 30~35GW 규모의 신규 용량 확충을 약속하고, EU 차원의 시장 활성화·인센티브 제도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용량 확대 촉진
 - **(가스 수요 감축)** 아울러 에너지 저장 인프라의 전력 피크 수요 부담률을 기존 5% →10%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역내 가스 수요 감축 유도
 - **(산업 전력화)** 역내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자원과 연계한 전력구매계약(PPA) 물량을 비롯해 상업·산업(C&I) 부문의 열저장·배터리 설치 용량, 재생에너지·저장시설 동시 설치 비율 등 관련 목표 설정

<'28년 저장 연계 전력구매계약 및 산업용 저장 용량 목표>

구분	'26년 현황	'28년 목표	비고
저장 연계 PPA 물량	1.5GW	4.5GW	3배 확대
C&I 부문 산업용 열 저장 용량	0.5GWh	1.5GWh	3배 확대
C&I 부문 배터리 설치 용량	9GWh	24GWh	2.6배 확대
C&I 부문 재생에너지·저장시설 동시 설치 비율	5%	20%	4배 확대

자료 : 에너지 저장에 관한 3자 협약문([링크](#))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

- 협약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위원회 등 공공부문, 금융권, 산업계의 역할을 명시
 - **(집행위원회)** 에너지 저장 용량 구축을 위해 회원국 지원 체계 설계 및 관련 국가 보조금의 신속한 승인 보장, 저장 장치 확산을 위해 발전기 요구사항 최신화 등

- (회원국) 국가별 에너지 저장 용량 목표 제출 및 이행, 전력구매계약(PPA) 및 장기 계약 등 저장 장치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, 국가 보조금 및 EU 기금 활용 지원
 - (에너지 수요 기업)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자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, 해당 산업 부문의 전력수요 가시성 및 명확한 소비 계획을 시장에 제공
 - (에너지 생산 기업)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시 관련 저장 용량이나 예측치 등 관련 예상 물량을 투명하게 공유
 - (금융기관) 유럽투자은행(EIB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국가 및 지역 은행은 에너지 저장 장치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 및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상품 및 자문 제공 등 협력 극대화
- 동 협약은 22개 참여 회원국에 '26~'28년까지의 저장 용량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
- 이 중 17개국은 이미 구체적인 에너지 용량을 명시한 저장 계획을 제출했으며 5개국은 '26년 말까지 계획서 제출 예정
 - 해당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,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회원국의 에너지 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목표와 명확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

<참여 회원국별 '28년 에너지 저장 목표>

회원국	'26년 현황	'28년 목표	회원국	'26년 현황	'28년 목표
오스트리아	-	5,000MW	아일랜드	1,110MW	660MW
불가리아	2,900MW	1,150MW	이탈리아	-	10,000MW
크로아티아	500MW	1,000MW	라트비아	31MW	120MW
키프로스	120MW	400MW	리투아니아	-	1,085MW
체코	-	1,000MW	몰타	-	40MW
덴마크	'26년 말까지 제출 예정		네덜란드	'26년 말까지 제출 예정	
에스토니아	-	550MW	폴란드	-	11,000MW
핀란드	'26년 말까지 제출 예정		포르투갈	-	500MW
그리스	'26년 말까지 제출 예정		루마니아	-	2,496MW
독일	'26년 말까지 제출 예정		슬로바키아	-	376MW
헝가리	700MW	1,000MW	스페인	4,000MW	5,000MW

주 : '28년 목표는 신규 확충 용량 기준. 단, '26년 현황이 빈칸(-)인 국가는 누적 목표 용량을 의미
 자료 :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저장에 관한 3차 협약 페이지([링크](#))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

• 자료 : EU 집행위원회(6.26, (2), EU 이사회(6.26)) / 작성자 : 브뤼셀무역관 윤윤희(unoin@kotra.or.kr)



□ [통상] EU, 알루미늄 스크랩 역외 수출에 15% 부과금 도입 검토 중

- EU 집행위원회는 알루미늄 스크랩의 미국·아시아 등 역외 수출 증가에 대응해, 역내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15% 수출 부과금 도입을 검토 중*
- * 현지 언론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'26.9.9일 해당 수출 부과금 도입을 제안할 전망
- EU 알루미늄 생산업체는 해외 제련소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럽산 스크랩을 매입한 후, 이를 녹여 EU로 역수출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

- 미국은 완제품 알루미늄 수입에 50%의 관세를 부과하나 스크랩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어, 유럽산 스크랩이 역외로 유출되는 요인으로 작용
- 유럽알루미늄협회에 따르면 '25년 EU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은 127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부분 인도·중국향. 최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GCC 지역의 스크랩 수출이 줄면서 EU산 수요가 증가한 상황
- 한편 수출 부과금 도입을 두고 알루미늄 생산업계와 폐기물·재활용 업계 간 입장 대립
 - 알루미늄 업계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알루미늄 스크랩 부족으로 역내 알루미늄 재활용 설비의 약 15%가 미가동 상태라며 수출 부과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
 - 반면, 폐기물·재활용 업계는 수출 부과금 도입이 역외 거래를 위축시키고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을 낮춰 EU 순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
- 향후 EU 집행위원회 제안이 공식 발표될 경우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(QMV)* 방식의 승인이 필요하며, 도입 시 EU가 역외로 반출되는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첫 사례
 - * Qualified Majority Voting: EU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이 찬성하고, 찬성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%를 대표해야 함

• 자료 : FT(6.26) 등 / 작성자 : 브뤼셀무역관 황준혁(jh10535@kotra.or.kr)

□ [운송] 독일 車업계, 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규모 구조조정 중

-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 업체와의 비용·가격 경쟁 심화에 대응해 대규모 비용 절감과 생산능력 감축을 본격화
 - 폭스바겐은 기존 '30년까지 독일 내 5만 명 감원 계획에 추가 5만 명을 더한 최대 10만 명* 감원 및 4개 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
 - * 전체 인력 62.5만 명의 약 6분의 1 규모로, 실현 시 역대 최대급 기업 구조조정 사례에 해당
 - BMW는 구조조정에 최대 10억 유로가 소요될 수 있다고 예고했으며, 최대 1만 명 감원과 유럽 생산 15%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고, 메르세데스-벤츠도 보너스 지급 보류와 5,500명 희망퇴직 등 비용 절감 조치를 강화
- 중국 자동차업체의 유럽 시장점유율 확대는 EU 차원의 보호조치와 유럽 자동차 산업 재편 필요성을 동시에 부각하고 있음
 - 5월 유럽 신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% 증가했음에도 주요 유럽 완성차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반면, BYD·체리 등 중국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처음으로 10%를 상회하며 역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
 - 관련 분석에서는 EU가 전기차 관세·현지 생산요건·보조금 연계 등 보호조치로 단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, 유럽 자동차업계도 전략적 생산·기술 협력, 생산시설 공유, 저가 배터리 조달, 방산·로봇 등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

• 자료 : FT(6.27(1), 6.27(2)) / 작성자 : 브뤼셀무역관 심은정(inji.sim@kotra.or.kr)

□ [보건] EU, 임상조사 면제 대상 의료기기 목록 확대 위임규정 관보 게재(6.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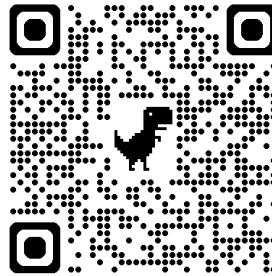
- 6.29일, EU 집행위원회는 EU 의료기기 규정(Medical Device Regulation, MDR)상 일부 이식형 의료기기 및 3등급 의료기기의 임상조사(clinical investigation) 수행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위임규정((EU) 2026/1451)을 관보에 게재
 - 동 규정은 MDR 제61조 제6항 (b)호를 개정해, 충분한 임상자료에 기반하고 관련 제품별 공통규격(CS)을 충족하는 일부 기기에 대해 임상조사 수행 의무를 면제
 - 위임 규정에 따라 두개골 천공기, 카테터 관련 기기, 치과용 임플란트·베니어, 재사용 수술기구, 가이드와이어, 혈관 내 색전 코일, 셉트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됨
 - 다만 임상조사 수행 의무만 면제되며, MDR 제61조에 따른 임상 평가(clinical evaluation)의 계획·수행·문서화 의무는 유지됨
- 해당 규정은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,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

• 자료 : EU 관보(6.29) / 작성자 : 브뤼셀무역관 노효주(hyoju.no@kotra.or.kr)

 **무역관 안내**

□ EU 순환경제 규제(PPWR·ESPR) 대응 웨비나(5.27) 중 PPWR 영상 게재 안내

- 주요 내용 : '26년 하반기 본격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(PPWR)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
- 링크 : 썸네일 이미지 클릭 또는 QR 코드 촬영



 **EU 분야별 의견수렴**

분야	내용	수렴 기간	링크
운송	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(AFIR) 개정 검토 관련 증거 수집	5.11~8.3	링크
공급망	핵심원자재법(CRM) 내 원자재센터 구축 위한 증거 수집	5.19~8.11	링크
순환경제	철강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규정(ESPR) 위임법 제정위한 증거 수집	5.20~8.12	링크
보건	담배 규칙 개정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 수렴	5.18~8.14	링크
자동차	Euro 7 전동화 차량 성능·브레이크 분진 규제 관련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①전동화 차량 성능 형식승인 개정법, ②브레이크 분진 형식승인 시행령	5.27~6.24	개정법, 시행령
ESG	공급망 실사(CSDDD)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증거 수집	6.12~7.24	링크
해양	해양 연구·혁신 전략 마련 위한 증거 수집	6.15~8.2	링크
R&D	차기 Horizon Europe 공동사업체(JU) 개편 위한 증거 수집	6.16~7.14	링크
디지털	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정 위한 증거 수집	6.17~7.15	링크